광주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의혹 파문

영장 없이 도박단 대화 내용·영상 수집…경찰에 제보
법조계·경찰 "단순 탐지 벗어나 위법 소지 다분"
전파관리소 "범죄 입증 위해 일정부분 수집한 것"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사흘에 걸쳐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과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상당부분 중간에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전파관리소는 "무전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느라 3일간 업무를 수행했고 추후 범죄 혐의 입증에 어긋남이 없도록 대화와 도박 장면을 일정부분 수집한 것"이라며 감청 의혹을 부인했다.

2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2일 밤 광산경찰서를 찾아 무전기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고서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

사기 도박단 남모(36)씨 일당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44초 분량)과 카드를 돌리는 장면(영상)도 관련 증거라며 경찰에 제시했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이상 주파수를 탐지하고 사기 도박단의 소행이라고 판단해 도박장의 위치(광산구 우산동 모 술집)는 물론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카드를 돌리는 영상과 상대의 패를 무전으로 알려주는 대화 내용을 수집,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제시한 증거물을 본 경찰 관계자는 "원거리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마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느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뒤 "그런데 (사기도박단이라고 해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화내용과 영상을 수집하면 큰일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우리는(전파관리소)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광주전파관리소의 이 같은 감청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수사기관도 불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파관리소 측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전파감시'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수집한 대화와 영상이 '전파감시' 업무 범위 이내라고 여기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전파법(49조)에 규정된 감시업무는 전파 품질 측정, 혼신 전파 탐지, 무허가 전파의 탐지 등으로 측정 내지는 탐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임정훈 변호사는 "사안을 좀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수행된 전파관리소의 대화 내용 및 도박 영상 수집 업무는 단순 탐지 업무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도박 사범에게도 통신의 자유, 감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광주전파관리소가 수집한 대화와 영상은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보기 힘들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너무 나간 것 같다. 녹음된 대화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영상을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녹음·녹화한 것으로 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교대 공포의 '떠돌이 개' 잡았다

북부소방서·대학 합동 포획 작전 9시간만에 포획

광주교대 교정을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떠돌이 개'〈광주일보 2월 22일자 6면〉가 소방서 직원들에게 포획됐다.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에서 300m 떨어진 주유소 인근에서 '떠돌이 개' 포획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부소방서가 지난 22일부터 동부소방서, 광주교대 측과 함께 합동 포획작전을 펼친 지 9시간만이다. 포획작전에는 직원 10여명과 포획망, 마취총이 동원됐다.

포획된 개는 지난해 11월부터 교내를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바지와 신발을 물어 뜯는 등 위협을 가해 학교 측으로부터 수차례 포획 요청이 들어왔던 유기견이다. 하지만 움직임이 민첩해 번번이 출동한 소방관들을 골탕 먹였다.

조태길 서장은 "마취된 상태로 도주한 유기견이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포획돼 다행"이라며 "유기견을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장기결석 학생 66명

광주지방경찰청은 지역 유·초·중학교 4일 이상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일제 점검한 결과, 총 66명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학대나 학교폭력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취학 아동은 23명이며, 경찰서별로는 동부 4명·서부 2명·남부 3명·북부 7명·광산 7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은 총 11명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미취학 아동은 없었다.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은 총 32명으로 동부 4명·서부 5명·남부 3명·북부 12명·광산 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31명의 소재(복귀·대안학교·검정고시·7명은 출석독려 조치 등)를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데 관리지역을 이탈해 수배된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리 졸업했어요" 2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제31회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복을 입은 졸업생들이 환한 미소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립의료원 인사교류·관리 시스템 강화
나이롱 환자·납품 비리 재발 방지 나서

이낙연 지사, 의료원 비리 사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허위 입원 후 보험금 수령, 순천의료원 의료기기 납품비리 등과 관련〈광주일보 2월 19일자 6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엄중문책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진의료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한편 의료원간 인사교류 추진, 직원 복무관리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순천의료원 관련 대책으로 허위 입원 후 보험금 수령 직원 중징계 처분, 의료원 간 인사교류 도입, 복무관리 시스템 강화, 공중보건의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또 의료원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남도공무원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의료원 직원들이 입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장비 도입과 관련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와 공무원 등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5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국립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최종 심의하도록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미국을 순방중인 이 지사는 이날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모범을 보여야할 도립의료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도가 예방하지 못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도민에게 실망감을 준데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도는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3년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의사, 간호사, 직원 등 40여 명을 적발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의료원장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억대의 중고 의료장비를 새 장비인 것처럼 납품받도록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강진의료원장은 최근 사태와 관련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고법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인가 무효"

"토지 3분의2 이상 수용 요건 못갖춰 위법"…담양군은 상고
민자 등 587억 투입 사업 위기…주민들 반환소송 잇따를듯

담양군이 587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메타프로방스'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인가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대란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병칠)는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메타프로방스는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상가·호텔 등을 밀집시킨 유원지 사업이다. 2014년 펜션·상가가 개장해 영업 중이며, 올해 말에는 관광호텔 신축공사도 끝난다. 이 곳은 '담양의 작은 유럽'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명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사업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이 회사는 사유지 전체면적의 약 59%만 확보하는데 그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중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흠결은 중대한 하자"라며 "지정신청서에 이 같은 사실이 기재돼 있어 쉽게 알 수 있는 담양군이 이를 유효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하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이를 토대로 인가처분한 것 또한 중대·명백한 하자여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 시행자는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조성된' (공사가 완료된) 것이어야만 처분될 수 있다"며 "디자인프로방스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주요 공익시설 등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점은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대란이 예상된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없는데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며 "상고심 과정에서 쟁점별로 차분히 대응해 군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담양=정재근기자 jjg@

동료 금팔찌 훔친 50대, 거짓말탐지기 조사 부담감에 실토

쌍나팔

○…동료의 고가 금팔찌를 훔친 50대 식당 종업원이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실토.

○…2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 A(여·52)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식당 탈의실에서 동료인 B(여·51)씨가 가방에 벗어 둔 193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몰래 가져간 혐의.

○…경찰이 범행 현장인 탈의실 위치 등으로 미뤄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주방 종업원을 상대로 탐문수사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나서려하자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금팔찌가 너무 탐이 나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댔다. 가져간 팔찌는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 17461	1	남구 방림동 89-25 송학아파트 가동 4층 410호 58.5㎡	아파트	58,000,000 / 58,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5타경 11500	1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071 983㎡ / 동소 1071 1층79.72㎡ 2층20.18㎡ 제시외 창고 등 90㎡[제시외건물포함]	대 / 단독주택	154,681,400 / 154,681,400	일괄매각, 목록1수목매각예포함
2015타경 15816	1	서구 용두동 509 661㎡ / 서구 마현길 12-6 60.49㎡ 부속건물[멸실] 축사32.72㎡ 부속35.37㎡ 부속13.22㎡	대 / 주택	109,436,720 / 109,436,720	일괄매각, 목록1이동식콘테이너박스주택및화장실소재
2015타경 19344	1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231 264㎡ / 장성군 진원면 오천길 29 79.5㎡ 부속건물 주택19.9㎡ 부속사34.9㎡[현황11.6㎡] 축사7.9㎡[멸실] 제시외 주방 등 129.6㎡ /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226-1 66㎡	대 / 주택 / 대	94,045,900 / 94,045,90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목록2주택구조는공부와현황차이있음, 목록3은목록1에합병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5타경 9835	1	서구 쌍촌동 528-1 엘도라빌 비동 3층 306호 59.71㎡	다세대	80,000,000 / 8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8894	1	영광군 백수읍 천정리 503-1 1226㎡	답	9,562,800 / 9,562,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11500	2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071-4 201㎡	전	7,035,000 / 7,03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15007	1	화순군 춘양면 화림리 1117-5 1981.7㎡	답	33,688,900 / 33,688,9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15298	1	남구 화장동 1120-7 2010㎡	답	80,400,000 / 80,400,000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408 1262㎡	답	36,598,000 / 36,598,000	묵답,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15816	2	서구 용두동 510 337㎡	전	42,799,000 / 42,799,000	맹지
2015타경 16055	1	남구 월산동 1037-30 41㎡[3분의1김인석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	3,895,000 / 3,895,000	맹지, 소유자불명의농작물소량식재
2015타경 16086	1	광산구 사호동 27-6 717㎡[인접번지와경계불명]	전	14,340,000 / 14,3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16543	1	화순군 북면 맹리 221 1422㎡[연고미상의분묘4기소재, 수목매각포함]	전	15,420,000 / 15,4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맹지, 묵전
2015타경 62461	1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337-2 167㎡	대	3,674,000 / 3,674,000	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5타경 11500	3	광산구 월계동 891-4 리치빌딩 6층 601호 206.83㎡	근린시설	240,000,000 / 240,000,000	
2015타경 11630	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4층 402호 25.9㎡	근린시설	66,000,000 / 66,000,000	
2015타경 13865	1	광산구 수완동 1117 수완제일프라자 1층 101호 47.884㎡	근린시설	259,000,000 / 259,000,000	
[자동차, 중기]					
2015타경 61642	1	사용본거지:남구 백운동 백운로5번길 48-1[백운동] 등록번호:68두6625 차명:쏘렌토 연식:2010	자동차	14,500,000 / 14,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2 심산주차장
[기타]					
2015타경 15625	1	남구 주월동 487-22 463㎡[남구청설치화단1식소재, 공도로이용중]	도로	117,602,000 / 117,602,000	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이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3. 10.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3. 17.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공개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2.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